주간통일정세 2010-49(2010.11.29~12.0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49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北김정일-정은, 공연 관람…연평도공격 닷새 뒤?(11/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국립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국립교향악단 공연에는 교향연곡 '당에 드리는 노래', 피아노 협주곡 '번영하라 조국이여',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등이 올려짐.
- 김 위원장은 공연 후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예술형상으로 그려내 문화정서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고,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작과 편곡 수준을 끌어올리고 연주기량도 높여야 한다"고 말함.
- 리영호(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와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 강석주(내각 부총리 겸직),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김양건·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겸직) 등이 동행

北김정일, 함흥 룡성기계 현지지도(1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경남도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분공장(分工場, 본공장과 별도로 건설한 공장)을 현지지도
-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속에서 통신이 29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한 이후 하루만임.
- 통신은 김정은이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에는 동행했다고 전했지만, 룡성기계공장 현지지도 수행자 명단에서는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공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후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면서 "눈부신 비약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 와도 끄떡없이 사회주의 원칙,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을 앞장에서 떠밀어 나가는 룡성노동계급의 투쟁정신, 영웅적 조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의 발현으로 된다"고 강조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태종수(당 비서 겸직), 곽범기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

임비서가 수행

○ 北, 연평도공격 '김정은 작품'으로 선전(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대해, 남측의 계속된 도발에 후계자 김정은이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고 전함.
-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이 방송에 "강연회나 인민반 회의에서 '적들의 계속된 도발책동에 김정은 대장이 본때를 보여준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북한)가 먼저 공격했다는 것은 중학교 아이들도 다 안다"고 밝힘.
- 이어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선전이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미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배짱과 전략을 지닌 영도자로 내세워 주민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으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분석함.
- 또 "남한 군의 대응 포격으로 북한 군부대 막사와 장교 집, 민간 주택 등이 상당수 파괴됐지만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민간의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남측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나돈다"고 전함.
- 방송은 "민간 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북한은 유사시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군사시설과 군수공장 등을 주민거주 지역에 둔다"면서 "이번에 민간 주택이 많이 파괴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함.

○ 北김정일, 잇따라 함흥시 시찰(1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의 산업시설 등에 대한 현지지도(시찰)를 이어가고 있음.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함흥시의 백운산종합식료공장, 영예군인(상이군인)수지일용품공장, 흥남제약공장과 함흥수리동력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의 함흥시 현지지도 수행자 명단에서는 김정은을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국수와 당과류, 빵 등을 생산하는 백운산식료공장에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해 내라"고 강조했으며 흥남제약공장에서는 "공장 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약품 생산을 늘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밝힘.
- 그는 또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교육과학전시관과 강의실, 도서관을 둘러보고 교수, 연구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태종수(당 비서 겸직), 곽범기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

임비서가 수행

북한 내각에 국가자원개발성 신설(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에 채취공업성과 별도로 국가자원개발성이 신설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일 내각 채취공업성 산하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국가자원개발성'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통신이 이날 전함.
- 이로써 북한 내각 부서는 31개 성, 3개 위원회, 국(局, 상위 부서 없음) 및 부(部) 각 2개, 원(院) 및 은행 각 1개 등 모두 40개로 늘어남.

北김정일, 함남 단천시 산업시설 시찰(1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단천시의 단천마그네샤공장과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항 확장공사현장을 시찰
- 현지지도 수행자 명단에는 앞선 시찰에 이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빠져 있어 이번 함남도 지역 시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마그네사이트를 원료로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경소마그네사이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단천마그네샤공장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포장용기 생산공정 등을 둘러보고 "용도에 따르는 질 좋은 포장용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 단천광산기계공장을 방문해서는 CNC(컴퓨터수치제어)화 실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 공장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대량채굴과 대량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만들어 보내주어야 한다"고 지적함.
- 김 위원장은 이어 단천항 확장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단천항에서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며 항구의 조기완공을 독려하기도 함.
- 곽범기 함남도 당 책임비서와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임), 김경희(당 부장 겸임),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임), 박도춘·태종수(당 비서 〃) 외에 국방위 현철해·리명수 국장이 수행

北김정일, 함경북도 무산광산 현지지도(1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에 이어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산업시설에 대한 현지지도를 계속하고 있음.
- 통신은 이날 저녁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무산군의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통신은 함흥시 현지지도에서부터 줄곧 수행원 명단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거명하지 않고 있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세찬 눈보라를 헤치며 높은 산정에 위치한 대형 파쇄장에 올라 건설 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

다"며 "제철, 제강소들에 질좋은 철정광을 더 많이 보내주자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2호 박토파쇄장과 새로운 광석파쇄장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며 광산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그는 또 식료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해 군안의 인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함.
- 오수용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태종수(당 비서 겸직) 외에 국방위 현철해·리명수 국장이 수행

○ 김정일, 모친고향 '회령시' 시찰(1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회령시를 찾아 오산덕 언덕에 있는 모친인 김정숙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회령대성담배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 등을 현지지도
- 김 위원장은 이어 회령식료가공공장을 찾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식품들을 많이 생산해 여성을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회령고려약공장을 방문해 공장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고 "고려약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고려약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해 약을 엑스(진액)화해야한다"고 지적
- 오수용 함북도 당 책임비서와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임), 김경희(당 부장 〃),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 박도춘·태종수(당 비서 〃) 외에 국방위 현철해·리명수 국장이 수행

[위키리스크의 북한관련 보도내용]

○ 北서 3차례 쿠데타 시도(11/30, 위키리스크)

- 북한 내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는 첩보들이 있었으며, 화폐개혁 실패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 이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온 것으로 30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드러남.
-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2월 28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같은 달 3일 한국 내 북한 전문가 5명과 만났음.
- 전문에 따르면 이날 익명의 한 전문가는 "1990년대에 3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은 후 김정일은 매우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했고 쿠데타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 처형함으로써 미래의 음모자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고 말함.
- 또 "김정일이 도전들을 막아낸 비결은 잔혹한 탄압과 국제사회의 지원이었다"며 "군부만이 (북한 정권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정보당국이

군부를 성공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함.

- 당시 캠벨 차관보와 접촉한 한국 측 전문가들의 신원은 위키리크스 측이 'XXX'표시로 비공개 처리해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밝힌 견해의 신빙성 등도 확인되지 않음.

○ **김정일 판단·결단력 감퇴(12/1, 위키리스크)**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강 악화 이후 판단력과 결단력이 급격히 떨어져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이날 드러남.
- 주선양(瀋陽) 미국총영사관이 지난 1월 11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촉한 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일이 건강이 악화한 이후 현저하게 결단력이 약해졌다는 정보를 얻음.
-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에 'XXX'로 익명 처리된 이 정보원은 "김 위원장은 건강 악화 이후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는 일이 잦아졌으며 결단력도 상당히 약해졌다"고 평가함.
-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한 북한 유학생이 '이탈'하자 중국에 거주하던 북한 학생과 학자, 과학자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렸으나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역 담당 관료들이 이를 취소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 백지화시켰다는 것.
- 그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북한 무역업체들은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오히려 인원을 충원했다는 게 이 정보원의 전언임.

○ **北강경행동, 권력세습과 직접 연관(12/1, 위키리스크; 르 몽드)**

- 북한의 대외 행동이 강경해지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권력 세습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프랑스 유력지 르 몽드가 이날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을 인용해 보도
- 르 몽드는 이날 국제면 기사를 통해 2008년 봄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격침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수집한 대부분의 정보가 이와 같은 분석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경색으로 가속화된 북한 내 권력 세습 과정이 북한문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2009년 4월 러시아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은 한 북한담당 러시아 외교관은 북한이 핵 문제에 강경하고 한국에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은 "권력승계와 관련한 내부적 암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함.
- 또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만난 북한정보를 분석하는 한국군 고위장교도 북한 군부는 불만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내부에 메시지를 보낼 것을 명령받았는데 "모든 반대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르 몽드는 전함.

○ **北화폐개혁은 권력승계 준비용(12/1, 위키리스크)**

- 북한이 지난해말 단행한 화폐개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3남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용이었던 것으로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

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나타남.

- 이날 미국 국무부의 기밀 외교전문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은 최근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데이비드 쉬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스티븐 위크먼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북한의 정통한 소식통을 만나 파악한 최근의 북한 내 정황을 보고함.
- 외교전문은 이 소식통에 대해 북중간 경제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라고 소개했으나 'XXX'로 표시, 정확한 신분을 드러내지는 않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색출하는 것으로, 특히 권력 승계자인 김정은에 반대하는 내부세력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분석함.
- 김정은이 화폐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자연스럽게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반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 이와 관련, 김정은의 맏형인 김정남은 화폐개혁에 반대했으며 베트남식 개혁을 선호하는 김정은과는 달리 김정남은 중국식 경제개방 정책을 선호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도 화폐개혁을 지지해 막내아들에 대한 선호를 보여줬으며, 지난해 2차 핵실험도 권력승계 계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진단함.

○ **김정일 줄담배…건강은 양호(12/2, 위키리크스, 슈피겔)**

- 미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줄담배를 피우는 등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건강이나 정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해 1일 보도
- 또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북한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때 주민들의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숨기기 위해 제 때 식사와 비타민으로 상봉 대상자들을 살찌게 한 뒤 상봉장으로 보냈다고 본국에 보고함.
- 이와 함께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영원한 적은 없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짐.

○ **北, 6자거부 이유는 中·러의 대북제재지지 때문(12/2, 위키리스크)**

- 북한이 과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의 유엔 대북제재 지지에 불만을 품고 6자회담을 거부했었다는 내용의 미국 외교전문이 공개됨.
-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일(현지시각) 공개한 주몽골 미국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북한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8월 몽골·북한 간 연례 협의회에서 6자회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냄.
- 현지 주재 외교단에 양국 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한 J. 숙희(Sukhee) 몽골외교통상부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 부상이 6자 회담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은 끝장났다

(dead)는 표현까지 썼다고 전함.

-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부상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것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라고 밝힘.
- 당시 김 부상은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데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들 3자를 지지하면서 북한은 마치 '5 대 1(five against one)' 상황에 처한 느낌"이라는 말을 했다고 숙희 부국장이 전함.
- 김 부상은 이어 "6자 회담의 진정한 목적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는 말도 전함.
- 이 전문에는 또 북한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대화의 기대를 키웠다는 김 부상의 발언도 담겨 있음.
- 김 부상은 당시 억류된 여기자 석방을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그러한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함.
- 또 김 부상은 "부시 정권 때 양국 관계가 막혔지만 클린턴의 개인적 능력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기 때문"이라고 기대를 나타냄.
- 김 부상은 또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을 만나서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우호적인 사적 이해(good personal understanding)'가 존재한다며, 몽골 정부에 북미 대화 지지를 당부함.

■ **김정일동향**

- 11/28 김정일, 비전향장기수 '장호'(90세)와 '우용각'(80세)에게 생일상 전달(11/29, 중통)
- 11/29 김정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현지지도(11/30, 중통·12.1,중방)
  - 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김기남·홍석형(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委 부위원장), 박도춘·태종수(黨 비서) 등 동행
- 11/30 김정일, 리원산(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등 6.18건설돌격대 지원자들에게 「감사」전달(12/1, 중방)
- 12/ 1 김정일, 함흥시의 경공업공장들(백운산종합식료공장, 함흥명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12/1, 중통·중방)
  - 곽범기(함경남도위 책임비서), 김기남·홍석형(정치국 위원들),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태종수(黨 비서들) 동행
- 12/ 1 김정일, 함흥시의 함흥수리동력대학 현지지도(12/1, 중통·중방)
  - 곽범기(함경남도위 책임비서), 김기남·홍석형(정치국 위원들),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태종수(黨 비서들) 동행
- 12/ 1 김정일, 원산농업종합대학에 보낸 교육과학연구설비들 전달모임

・전기영동상촬영장치, 냉동고속원심분리기, 무균조작대, 회전증발기

- 12/ 1 김정일, 김수조(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피바다 가극단 총장) 영전에 화환 전달(12/1, 중통)
- 12/ 2 김정일, 咸南 단천시의 여러단위(단천마그네샤공장,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항 건설장) 현지지도(12/3, 중통)
  ・곽범기(함경남도委 책임비서), 김기남·홍석형(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委 부위원장), 박도춘·태종수(黨비서), 현철해·이명수(국방委 국장) 등 동행
- 12/ 2 김정일, 강연선전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강사들에게 「감사」 전달(12/3, 중방)
- 12/ 4 김정일, 회령시 회령대성담배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 등 현지지도(12/4, 중통)
  ・오수용 함북도 당 책임비서와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임), 김경희(당 부장 〃),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 박도춘·태종수(당 비서 〃) 외에 국방위 현철해·리명수 국장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사회주의는 인민의 운명이며 집단주의는 우리(北)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라며 각 분야에서 全民의 "수령에 충실한 집단주의 구현과 사상무장" 강조 및 '자본주의 배척' 선동(11/29, 평방)
-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애국애족의 정치, 평화수호의 기치"라며 "총대중시, 선군정치 옹호지지" 선동(11/29, 중방)
- 北, "평화적 핵활동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국제사회 모든 성원들의 자주적 권리"라며 '경수로건설사업의 평화적 목적', '전력수요 보장을 위한 방책'이라고 주장(11/30, 중통)
- 조선노동당 중앙委 「감사문」전달(평양수지연필공장 노동자·기술자 등 공장 현대화공사에 노력적 위훈) 모임, 11/30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진행(12/1, 중방)

나. 경제

○ 北, 中에 인력 대거파견…경협확대 모색(11/2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 인력을 대거 파견,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날 단둥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단둥에서 활동하는 북한인들이 눈에 띄게 부쩍 늘었다고 함.

- 단둥의 한 소식통은 "최근 단둥에 유입된 북한 인력은 대부분 20~30대 젊은층"이라며 "자유롭게 사우나를 드나드는 것은 물론 안마까지 받는 등 씀씀이가 큰 걸 보면 단순 노무 인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함.
- 한 소식통은 "남북 교역 중단에 따라 북한이 IT 분야 일거리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유입된 북한 인력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나 중국 IT 인력 양성을 위해 파견된 전문가들일 것"이라고 분석함.

北화폐개혁 후 4천% 인플레…절상 효과 '물거품'(11/30, 데일리NK)

- 북한의 쌀값이 화폐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화폐개혁 이후 1년간 거의 4천%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현재 북한 평양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kg당 900원정도로 화폐개혁 직전인 작년 11월 하순(kg당 2천200원→신권 22원)에 비해 3천990% 올랐다고 함.
- 북한은 작년 11월 30일을 기해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화폐교환을 단행함. 따라서 지난 1년간 물가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신권 100원은 현재 구권 1만원의 교환가치를 가져야 함.
- 그러나 4천%라는 살인적인 인플레로 인해 신권 100원의 가치는 현재 구권 250원에 불과한 것임. 돈의 가치를 100배로 절상한 화폐개혁 효과가 불과 1년 새 거의 사라져, 신·구권의 구매력 차이도 '10 대 25'로 좁혀진 것임.
- 평양 쌀값은 올해 1월 중순 주요 종합시장 폐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3월 초 kg당 1천300원대로 뛰었다가 점차 시장기능이 되살아나면서 5월 초 4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 환율 상승과 폭우피해로 8월에는 다시 1천원선을 넘어섬.

올해 北·中 교역, 사상 최대 예상(12/2, 미국의 소리(VOA))

- 방송에 따르면 올 1~10월 북·중 교역액은 작년 동기보다 32% 많은 미화 26억9천100만 달러로, 작년 전체 교역액(26억8천100만 달러)을 이미 넘어섰으며, 사상 최고였던 2008년(27억9천300만 달러)과 비교해도 1억200만 달러밖에 차이나지 않음.
- 북한은 그러나 수출 17억8천만 달러(31% 증가), 수입 9억1천만 달러(35% 증가)로 8억7천만 달러(26.6% 증가)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 VOA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7억9천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였다"면서 "올해에는 10월까지 실적만 갖고 이미 최고기록을 깬 것"이라고 지적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첨단 돌파는 黨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기본으로 되는 핵심전략, 첨단돌파전의 성패는 인재가 결정한다"며 '핵융합기술개발' 등 강성대국 건설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과 첨단기술 중요성' 강조(11/29, 중방·중통·노동신문)
- 北 중앙동물원과 평양가금지도국 수의방역소에서 '동물용 내장충 종합구충약', '닭전염성총배설강낭병 백신' 등 개발 선전(12/1, 중통)
- 北, 신의주방직공장 편직사직장 준공식, 12/1 현지 진행(12/2, 중통)
- 최근 개업한(11/16, 보도)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의 '내·외 건축美, 메뉴' 등 소개, 선전 및 "김정일의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이라고 찬양(12/2, 노동신문)

다. 군사

○ 연평도 대응사격으로 북한군 3명 사상(11/30, 연합뉴스)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우리 군의 연평도 대응 사격으로 북한군 장교 한 명이 사망하고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들었다"고 말함.
- 최 대표는 "지난 27일께 북한 소식통과 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고 정부에 알렸다"면서 "부상한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임.

○ 北서해지역 군부대, 갱도 내 비상경계 돌입(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지휘관들이 '서해부대'로 파견돼 비상경계 상태에서 전투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RFA가 전함.
-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이 방송에 "황해남도 연안의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서해사건(연평도 포격 지칭) 이후 인민군 총참모부 지휘성원(지휘관)들이 서해부대로 내려가 갱도 안에서 군인들과 숙식하며 전투력과 정신무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힘.
-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4군단 예하 부대에 있었다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도 "지금처럼 준전시 상황이 되면 최전방 부대들은 모두 갱도 안에 들어가며 잠잘 때도 군화를 벗지 못한다"면서 "갱도 안에서 전투식량인 말린 쌀을 먹으며 한동안 지낸 적도 있다"고 말함.
- RFA는 "인민군 총정치국에서도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사상교육과 반미 대결 선전, 대남 적화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신교육 내용 중에는 연평도 포격을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

전하며 충성을 강조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청진시의 9군단에도 '싸움준비를 완성하라'는 총참모부 지시가 내려와 교도대(민방위 해당) 무력까지 총동원 체제에 들어갔다"면서 "교도대 부대 간 협조체제 및 비상연락망 점검과 함께 방독면 착용, 전투배낭 준비 상태 등에 대한 검열이 진행됐다"고 RFA에 밝힘.

北방사포 100여문 증강, 자동화방공체계 구축(12/3, 연합뉴스)

- 북한 지상군은 최근 방사포 100여문과 전차 200여대를 늘렸으며, 공군은 자동화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능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은 5천100여문이던 방사포를 5천200여문으로 100여문 증강했다"면서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집중사격이 가능하다"고 밝힘.
- 북한은 전차를 200여대 증강했으며, 최근 기계화군단의 일부 예하부대를 전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북한은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 전차를 개발해 작전·배치했으며 신형 전차 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전함.
- 또 특수전 부대를 담당하는 경보교도지도국을 '11군단'으로 개칭하는 등 지상군은 15개 군단급 부대와 220여개 사단 또는 여단급 부대로 편성됐으며, 특수전 부대는 7개 사단, 25개 여단 규모라고 소식통은 설명함.
- 소식통은 "북한 공군은 최근 자동화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 대응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다"면서 "지상관제요격기지와 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 전역에 균등하게 분산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라. 사회·문화

北, 연평도 포격 직전 주민에 '비상소집령'(11/30, 데일리NK)

-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난 23일 교도대·노농적위대 등 민간무력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집령'을 내려 전투태세를 점검했다고 데일리NK가 보도
-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 매체에 "교도대와 적위대 소속 주민들은 3일간 먹을 건식(튀긴 옥수수, 건빵 등)을 준비하고 유해가스를 막기 위한 방독면, 연기가 나지 않는 싸리나무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과 각 인민반에서는 '연평도 포격은 남측의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는 내용의 교양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또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조·중(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봉쇄가 강화됐다"고 덧붙임.
- 이 매체는 "정규군뿐 아니라 민간무력을 소집하고, 주민들에게 등화관제 훈련을 한 것은 내부 긴장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면서 "'비상소집령'의 시기, 훈련 및 임무 수행 내용이 평소보다 긴박했던 점으로 미뤄 연평도 공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

北량강도 백암령서 열차 전복, 수백 명 숨진 듯(11/30, 자유북한방송)

- 이달 초 북한 량강도 백암군 백암령을 오르던 열차가 산밑으로 굴러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방송이 보도
- 방송은 량강도 소식통을 인용, "11월 초 평양을 출발해 량강도 혜산으로 향하던 제1급행열차가 백암령 중턱에서 전복된 뒤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면서 "열차 한 칸에 100명 넘게 탑승해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어 "사고 열차는 북한의 주요 도시에만 정차하는 특급열차로, 앞뒤 두 개의 기관차에 의해 백암령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사고를 당했다"면서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량강도 주민은 "평소에도 백암령에서는 열차 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 백암령을 올라가다 정전으로 멈출 때 노후화된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북한의 철길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침목으로 놓은 것이어서 침목을 고정하고 있던 못들이 튀어나와 탈선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전함.

재일민단, 조총련 앞에서 '연평도 공격' 규탄(11/30, 연합뉴스)

- 재일동포들이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앞에 몰려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규탄함.
-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회원 8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앞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만행을 직시하라"라고 외치는 등 30여 분간 시위를 벌임.

北평양예술단, 中 순회공연 마치고 귀국(11/30, 연합뉴스; 중국신문사)

-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인 평양예술단이 3개월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을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30일 평양을 출발, 중국 순회공연에 나섰던 평양예술단이 3개월 만인 지난 28일 귀국했다고 밝힘.
- 중국대사관은 42명의 평양예술단원들이 북한의 문화성 부상 한철과 주북한 주중대사관의 리쉐후이(李學惠) 참사관, 만수대예술단를 비롯한 북한 문화계 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국제열차를 이용해 이날 평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함.

- 단원들은 이번 공연이 북·중 문화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발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들어 두 번째 방중에 맞춰 지난 8월 30일 평양을 출발한 평양예술단은 이튿날인 9월 1일 베이징에서 중국 동방가무단과 합동공연을 펼쳤음.
- 이어 9월 7일 '북한관의 날'에 맞춰 상하이 엑스포에서 '활짝 핀 진달래'를 주제로 공연한 것을 시작으로 닝보(寧波), 광저우(廣東),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쿤밍(昆明), 충칭(重慶), 우한(武漢) 등 26개 도시를 돌며 31차례 공연함.

조총련계 고교, 100% 수업료 지원 신청(11/30, 교도통신)

- 통신은 현재 운영 중인 조총련계 고교(조선학교) 10곳이 모두 일본 정부에 수업료 지원을 신청했다고 보도
-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있는 조선학교 12곳 중 휴교 중인 2곳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10개교가 신청기한인 30일까지 일본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을 신청함.

北, 아시안게임 성적 '침묵'…종합 12위 불만?(12/1, 평양방송; 조선신보)

- 북한 매체가 지난달 27일 폐막한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국가별 성적을 주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음.
- 평양방송은 폐막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된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단이 귀국했는데 사격, 역기, 레슬링 등의 경기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0개를 쟁취했다"고 전했지만 북한을 포함한 국가별 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조선중앙TV는 1일 오후 8시 보도 시간에 북한 선수단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 36개의 메달을 딴 사실만 전했을 뿐 국가별 순위는 밝히지 않음.
- 이어 4.25국방체육단 안응철 부단장과 사격에서 메달을 딴 박명원, 조영철, 김지선, 조영숙과 인터뷰를 했는데 사격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박명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사격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시며 사격경기에서는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며 "저는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국제경기마다에서 선군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겠다"고 말함.

北집단체조 '아리랑' 연출 김수조 사망(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을 연출한 김수조 피바다가극단 총장이 사망
- 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수조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김수조는 세계 최대 집단체조로 2007년 8월 기네스북에 오른 '아리랑' 외에 노동당 창당 55주년기념 집단체조인 백전백승 조선로동당(2000년 10월), 고 김일성 주석 70회 생일 경축야회(1982년 4월), 제6차 노동당 대회 경축야회(1980년 10월) 등의 총 연출자였음.
- 또 북한의 '5대 혁명가극'에 드는 '밀림아 이야기하라'와 '금강산의 노래'를 비롯, 음악무용극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무용극 '봉선화' 등을 연출해 '인민예술가'(1989년 10월), '공화국 영웅'(2000년 11월), '김일성상 계관인'(2002년 8월) 칭호를 받음.

평양, 포격 도발 후에도 '평온'(12/2, 뉴욕타임즈(NYT))

- 여러매체들이 1일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수도 평양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다고 신문은 설명함.
- NYT는 평양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 국면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묘사함.
- 익명을 요구한 평양 주재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는 "평양 사람들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을 최근 수년간 일어났던 많은 사건 중 하나, 즉 일상적인 일(Business as Usual)로 보고 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평양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대체로 예전과 비슷하게 보는 것 같다"고 설명
- 외국인들에게 목격된 평양의 일상도 대체로 평온함.

"전쟁나면 입대" 北대학생 결의 잇따라(12/2, 데일리NK)

-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중앙대학'(주요 대학) 학생들이 전쟁 발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 자원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충성의 결의모임'을 잇따라 열고 있다고 매체는 전함.
-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7일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 이 대학의 초급당위원회와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지도 아래 전교생이 참여하는 '충성의 결의모임'이 열렸다"면서 "이 모임에서 '미제, 남조선과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장군님(김정일)과 청년대장(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전원 전선으로 달려가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이 대학뿐 아니라 평양과 다른 지역의 중앙대학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충성의 결의모임'을 가졌다고 한다"면서 "조만간 노동자, 농민 등의 궐기모임도 잇따라 열릴 것"이라고 덧붙임.
- 소식통은 그러나 "요즘 북한의 대학생들은 이런 모임을 끝내고 돌아서 코웃음을 친다"면서 "어릴적부터 남조선 영화를 접하고, 부모한테 자기 먹고살 궁리나 배우던 아이들에게 이런 국가적 호소가 통할 리 없다"고 지적함.

北, 군사적 긴장 계속…'김정은 때문' 불만 커져(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연평도 공격 직전부터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주민들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RFA가 이날 전함.
- RFA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연평도 도발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당 중앙군사위 명의로 '주변 군부대 및 군수시설에 전력공급을 집중할데 대하여'라는 긴급 명령이 떨어져 주민지구의 전력공급이 완전 차단됐다"면서 "군부대 전기를 함께 쓰던 군관(장교) 사택에도 전기가 모두 끊겼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인민병원 수술실, 기업소의 군수물자생산직장(생산라인) 등을 제외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기도 대부분 차단됐다"면서 "겨울철에 공장기업소 전력을 우선 공급해 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연평도 포격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임.
- "게다가 노농적위대, 교도대 등 민간무력이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가, 적위대 비상소집과 등화관계 훈련에 매일 이어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등화관제훈련이 연일 계속되면 주민들은 등잔불도 켜지 못해 큰 생활 불편을 겪게 된다"고 설명함.
- 량강도 소식통은 "정세 악화로 쌀값과 환율이 크게 오르자 모든 것이 김정은 탓이라는 인식이 퍼져,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연평도 사건 이전 혜산 장마당에서 kg당 900원이던 쌀값이 이달 1일에는 1천100원까지 올랐고, 중국 인민폐 1원도 220원에서 275원으로 뛰었다"고 RFA에 전함.
- 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이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이어진데다,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정세도 불안해져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라면서 "특히 중간급 간부와 지식인들은 김정은을 '철부지'로 보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RFA는 또 친척을 만나러 중국을 방문했다는 북한 주민 김모(황해도 해주시 거주)씨의 전언을 인용, "연평도 포격 직후 남한의 반격이 북한군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면서 "김정은이 연평도 사건을 감행한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땅굴(지하방공호 시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北회령에 평양 본뜬 호화 식당가 등장(12/3, 우리민족끼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에 '현대적인 식당가'가 들어섰다고 북한의 인터넷매체가 전함.
- 이 매체는 회령의 새 식당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2월 하순 처음으로 생모의 고향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령시 사회급양부문을 전국의 모범이 되게 하라"고 지시해 만들어졌다면서 "장군님(김정일)

께서는 건설자금과 일 잘하는 군인 건설자들을 보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건설과정의 크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 대책들을 취해주셨다"고 선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연면적 4천200㎡에 500석 규모인 회령관은 겉모양도 평양의 유명식당인 옥류관처럼 합각지붕에 푸른색 기와로 지어졌고 메뉴도 똑같이 고기쟁반국수와 냉면 등을 제공함.

○ **北, 함남 함흥만서 고래뼈 화석 발굴(12/3, 조선중앙TV)**

-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교수와 연구사들이 함경남도 함흥 앞바다 함흥만과 성천강 하류가 합치는 지점에서 북한 최초로 고래 골격 화석을 발굴했다고 중앙TV가 이날 전함.
- 원철국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는 이번에 발굴한 고래 골격 화석은 아래턱뼈와 제2 목뼈라면서, 아래턱뼈는 무게가 70kg이고 길이가 2.27m이며 제2 목뼈는 너비 40㎝, 높이 30㎝라고 밝힘.
- 원 부교수는 고래 뼈 화석을 연구한 결과 수염고래에 속하며 전체 몸무게는 100t 정도에 몸 길이는 18~18.5m로 판명됐다고 말함.
- 그는 또 고래뼈 연대분석을 한 결과 이 고래가 약 1만 년 전에 함흥수역에 내려와 살다 죽은 후 바닷물 속에서 화석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래골격과 같은 거대한 동물화석이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생물진화의 유구성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보적 가치가 있는 화석"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平北 정주시 동문중학교를 공화국영웅 '김정철중학교'로 명명하는 행사, 11/28 진행(11/30, 중통)
- 김정일 저작 '무용예술론' 발표 20주년 관련 "김정일의 사상이론에 의해 민족적인 춤형식과 근로자들의 다양한 생활내용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무용예술론이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선전(11/30,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최태복 방중…연평도포격 논의할 듯(11/3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날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함.
- 최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 공세에도 응하지 않은 채

중국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감.

- 최 의장의 이번 방중은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최 의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임. 그러나 중국 측은 최 의장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절 알리지 않았음.
- 최 의장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와 전인대 간의 교류차원에서 방중하는 것이지만 실제 노동당 비서를 겸하고 있어 카운터파트인 중국 공산당 고위인사들을 만나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짐.

○ 北김영일·中 왕자루이, 中공항서 접촉(12/1, 교도통신)

- 캄보디아 방문길에 중국에 기착한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공항에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통신이 이날 베이징의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김 국제부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중국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때마침 미국과 캐나다 방문길에 나선 왕 대외연락부장과 마주쳤고, 공항 내 모처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알려짐.
- 김 국제부장과 왕 대외연락부장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둘러싸고 고조된 긴장국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측됨.
- 한편 중국 외교부는 30일 정례 회견에서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베이징 외에 지린성(吉林省)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힘. 최 의장은 김 국제부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함.
- 중국 지린성에는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방문한 데 이어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발걸음을 하고 있음.

○ 北최태복, 中천즈리와 회동(12/1, 신화통신)

- 중국의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이 이날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고 통신이 보도
- 천 부위원장은 전인대에서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아래인 최 의장의 중국측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음.
- 통신은 그러나 천 부위원장과 최 의장 간의 자세한 회동 소식은 전하지 않음.
- 최 의장은 우방궈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30일 방중했으며 4박 5일간 머물 예정이며 베이징(北京)과 지린(吉林)성을 방문할 예정임.

○ 우방궈-최태복 회담…연평도사태 속 우의 과시(12/1, 중국중앙TV(CCTV))

- 중국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하고 친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
- 최 의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공개 파문과 뒤이은 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인사임.
- 우 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은 산천을 맞댄 이웃국가로서 두 나라의 전통적 우의는 국제적 풍운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왔다"며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변치않는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함.
- 우 위원장은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해 후 주석과 쌍방 관계 및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중요한 발전을 이뤄냈다고 지적하면서 고위층 교류를 지속하고 전략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협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자고 제안함.
- 이에 최 의장은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건설한 북중 전통 우의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양국 인민들의 이익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밝힘.
- 최 의장은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중국 전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면서 특히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무역과 관련한 입법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함.

○ 北 최태복 의장, 中 지린 방문(12/3, 길림일보)

- 지난달 30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 2일 지린(吉林)성을 방문했다고 길림일보(吉林日報)가 이날 보도
- 최 의장은 이날 지린에서 쑨정차이(孫政才)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성장 등 지린성 간부들과 만나 양측의 교류 확대와 경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의(美 국회, 2010년도 중국관련 보고서 등) '중국위협론'(미사일 등 국방력강화, 인터넷 안전위협' 등)은 "여론오도, 내정간섭"으로 "中美간 대립과 마찰이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11/29, 중방·노동신문)
- 日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등, 11/25 日本정부의 '北의 연평도 포격도발' 연계 "재일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중단 언급 유감표명" 및 무상화 적용 요구 긴급성명 발표(11/29, 조선신보)
- 유엔에서의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및 지지표시 관련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모독하고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 추호

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1/30, 중통)
- 국제대사령의 '美 인권고발 보고서' 관련 "미국은 인권옹호자의 탈을 벗어버리고 인류에 저지른 온갖 인권유린범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1/30, 중통·민주조선)
- 訪中 최태복(北 최고인민회의 의장), 12/1 '오방국'(全人代 위원장)과 베이징에서 회담 진행 및 '진지립'(全人代 부위원장)과 담화(12/2, 중통)
  ·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음.
-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창하는 경제의 '세계화' 등은 "경제적 침투책동"이라며 발전도상 나라들은 "자력갱생, 남남협조 등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발전 투쟁" 선동(12/2, 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중국 6자회담 제안에 회의적(11/29, 교도통신)

- 북한의 고위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극대화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3자 대화가 우선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이 북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을 소집하기에 앞서 "(최근 대결 국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 6자회담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
- 이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 과정을 살펴보려면 남한과 미국의 행동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회의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침.
-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날 내놓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통신은 해석함.

○ 北신문, "분리기 수천대로 우라늄농축공장 가동 중"(11/30, 노동신문)

- 신문은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밝힘.
- 이어 '평화적 핵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이용은 세계적 추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조선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지난 9~13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가 영변 핵시설 단지 내에 설치된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봤다고 전했으나, 북한 당국이 보도매체를 통해 '수 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임.

- 신문은 이어 "조선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경수로 발전소 건설로 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사업은 더욱 적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리영호, "6자회담 필요없어, 불벼락 계속될 것"(12/1, 제3방송; NK지식인연대)

- 북한 '군부 1인자'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이 주민 유선방송에 나와 6자회담 무용론을 펴면서 '불벼락 보복'이 계속될 것임을 호언한 것으로 전해짐.
-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리영호 총참모장이 연평도 공격 이틀 뒤인 25일 오전 제3방송에 나와, '지금까지 6자회담에 꼬박꼬박 참가해 성의를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없다. 미국과 대화도 이젠 필요 없다. 힘에는 힘이 김정일 장군님의 결심이며 장군님의 보복과 불벼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힘.
- 김 대표는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지방 단위로 '전시동원태세 지시문'을 보내 미국을 비난하는 군중대회를 열도록 명령했다고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말함.
- 북한의 '제3방송'은 각 가정에 스피커로 전달되는 일종의 유선방송망인데, 주민 선전·선동용으로 많이 쓰임.
- 따라서 김 대표가 전한 리영호의 발언이 사실이라 해도 북한의 실제 정책기조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기타 (6자회담(북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이스라엘의 "핵무장화를 물질·기술적으로 도와주고 비호 묵인해온 것이 미국"이라고 비난하며 "그 누구도 핵 분야에서 독단과 전횡을 부릴 수 없으며 이중기준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12/1, 중통)

3. 대남정세

○ 北신문 또 위협…"도발하면 아성 들어낼 것"(11/2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서해에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다시 무력공격 위협
- 신문은 논평에서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소동은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이로 인해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전야의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내외 호전광들이 다시 도발해 오면 주저없이 침략자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들어내 전쟁의 근원을 깨끗이 청산할 것"이라고 위협

- '붙는 불에 키질하는 위험한 도발소동'이란 제목의 이 논평은 또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북침기도와 호전적 정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그것은 가뜩이나 첨예한 사태를 기어코 전면전쟁 발발의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주장
- 논평은 "북측 영해에 대한 괴뢰들의 포사격 도발로 지금 조선 서해상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첨예한 곳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사태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이어 논평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 "남조선 호전광들이 북침을 가상한 '호국훈련'을 하면서 우리(북)측 영해에 수십 발의 포사격을 가해 우리 혁명무력의 반격을 받았다"면서 "우리 군대의 징벌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자위적 조치"라고 억지주장을 되풀이함.
- 북측은 연평도 포격 당일부터 1주일째 북한군 최고사령부보도, 외무성 담화, 판문점대표부 통지문, 중앙통신 논평 등을 연일 내놓고, 연평도 공격이 남측 도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옴.
-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소동으로 온 남조선 땅이 살벌한 동족대결 광란으로 끓어번지고 북남관계는 전쟁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함.

北, 南군 전단살포 비난(11/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군부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의도로 우리를 반대하는 삐라살포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대결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함.
- 논평은 또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위기에 처한 때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정세를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아넣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주장함.
-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일인 23일 저녁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김포 등에서 대북 전단지 40여만 장을 기구에 매달아 날려 보냄.

판문점 北장교 "군사충돌 다시 없기를"(12/2, AP통신)

-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뒤이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한 초급 장교가 이날 판문점에서 APT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

- APTN 기자들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으로 안내한 최송일 북한군 소위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양측 사이의 긴장이 "가능한 한 빨리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양측에서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남북 간에 그 같은 군사충돌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北정찰총국, "다음엔 南본토 포격"(12/2, 도쿄신문)

-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연내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이 이날 서울발로 보도
- 이 신문은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달 하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구체적 공격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또 정찰총국 간부가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함.
- 이 신문은 이어 또 다른 북한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했던 군사행동으로, 청년대장(김정은)이 더욱 큰 군사 보복으로 계속 타격을 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北, 국제회의서 "연평도포격은 자위적 대응"(12/5,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김영일 노동당 비서(국제담당) 겸 국제부장이 아시아 정당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연평도 포격이 자위적 대응조치였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김 비서는 지난 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제6차총회 연설에 나서 "남조선측이 우리의 최후경고를 받은 때로부터 5시간 후에 우리측 영해에 수십 발의 포 사격을 가해 우리 군대는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림.
- 김 비서는 "남조선측이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것처럼 걸고든 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당의 활동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는 안정된 주변환경"이라며 "외세의 간섭과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함.
- 이어 "우리는 경제와 환경 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을 위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더 좋은 아시아를 건설하

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해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한 우라늄 농축의 정당성을 주장

○ **北, 앞으로 사태 누구도 예측 못해(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일 남한의 해상사격훈련 재개 계획 및 연내 연합훈련 추가 실시를 위한 한미간 협의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
- 통신는 이날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면서 "괴뢰들의 도발적 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불능의 극한상황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고 북남 사이에 전면전쟁이 터지면 조선반도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어 "연평도 주변 우리측 해역에 대해 무모한 불질을 했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은 남조선 괴뢰패당이 군사적 도발과 전쟁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면서 "미국과 괴뢰들은 군사적 도발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결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統一部의 「2010통일백서」발간 및 수록 내용과 관련 "대결정책을 미화분식 한 반통일문서"라고 再次 비난(11/29, 평방)
- 北, "남측이 말하는 북방한계선이란 불법비법의 유령선"이라며 "한사코 북방한계선 고수책동에 매달린다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11/30, 중통)
- 北, "호국훈련을 벌리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번 사건(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충격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韓美야합무력도발 감행 시 예측할 수 없는 대응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11/30, 중통)
- 서해에서의 韓美연합 해상훈련 실시 관련 "영토와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1/30, 중통·민주조선)
- 정부의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및 지지표시 관련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강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동족과 대결하려는 책동"이라고 再次 비난(12/1, 중통·민주조선)
- 韓·美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관련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南 시장을 더욱더 개방하는 매국협상"이라며 "초보적 자주권도 행사할 수 없는 가련한 처지"라고 嘲笑(12/1, 평방)
- 北방송, 慶北 안동의 돼지목장과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인용 보도(12/2, 평방)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참석할 것"(12/2)

- 러시아가 연평도 포격 사건을 포함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논의하자며 중국 측이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2일 발표했음. 러시아가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 제안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임.
- 알렉세이 사조노프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수석대표 긴급협의와 관련한) 중국 측의 초청이 러시아에 전달됐고, 현재 6자회담 참여국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러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음.
- 사조노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우려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긴급협의가 열리면 러시아도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 앞서 지난달 28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처음 제안한 중국은 30일 재차 관련 당사국들에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러시아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제안에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음.

○ 푸틴 총리 "북핵 6자회담 재개 지지"(12/2)

- "러시아는 대화가 지속되길 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 상황 해법과 관련, 중국 측이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푸틴 총리의 발언은 앞서 지난달 말 중국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에 대해 러시아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됨.
- ◇ "개인적으로 6자회담 지지" = 푸틴 총리는 이날 오전 5시(모스크바 시간. 미국 동부 시간 1일 밤 9시) 방영된 미국 CNN 방송의 인기 토크쇼 '래리 킹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음. 푸틴 총리는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외 정책은 대통령이 담당해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러시아는 대화가 지속되길 원하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음.
- 총리실이 전문을 공개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푸틴은 "(한반도가) 아주 민감하고 우려스런 상황이며, 러시아 국경 바로 인근에서 벌어

지고 있는 모든 일에 러시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이 감정보다 우위에 섬으로써 대화가 시작되길 바라며 대화가 없이는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북핵과 남북한 문제 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 "중국,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 행사 가능" = 푸틴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우리(이해 당사국) 모두가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음.
- 푸틴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이해를 존중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그들(남북한 국민)과 올바른 대화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아주 복잡한 이 협상 과정에 관련된 6개국 모두의 조율된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역설했음.
- 그는 "(관계국들이) 통일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며, 이것이 공동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中 "대화노력 비판, 불공정"(12/2)

- 중국이 2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제안이 불공정하게 비판받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이들은 총칼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비판을 받는다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음.
- 장 대변인은 "러시아가 중국의 6자회담 긴급협의 제안을 지지했다"면서 "긴급협의 제안의 출발점은 현재의 중대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그는 "긴급협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동의한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음.
- 그는 그러면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의 방북 여부와 관련해 "일련의 외교활동을 하고 있고 유관국들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발표할 소식이 없다"고 전했음. 그의 이런 언급은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는 이어 중국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포격 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전으로 인해 사상한 인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

지만 사건의 배후에는 복잡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고 지적했음.

- 장 대변인은 특히 "남북한 모두 상대방이 먼저 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은 각 측에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언했음. 그는 또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에 이은 한국군의 단독 포격훈련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동맹에 기대거나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음.
- 장 대변인은 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인근에서 진행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미일동맹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미군함정의 댜오위다오 접근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속에서 나오는 중국 외교관들의 북한에 대한 언행이 중국 전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장 대변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황당무계한 문건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음.
- 아울러 장 대변인은 위키리크스 사이트가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돼 있으며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의 인터넷 관리는 국제적 통신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中제안 6자협의, 北 선전장 활용 가능성 커"(12/2)

- 리처드 부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2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런 가정에 입각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부시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기적인 도발은 북한의 전형적인 '게임플랜'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배경에 대해 "북한은 제한적 군사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자제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부시 실장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한국의 딜레마"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한.미는 대북 대비태세를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중국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북한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런 제안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협의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한·미·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상황이 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까지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중국이 제안한 협의는 대화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밝힌 것처럼 북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음.
- 부시 실장은 "중국이 계속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북한이 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백지수표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이를 깨닫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계속 옹호함에 따라 한중관계가 악화한다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제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 "그 파급력을 생각할 때 확률이 낮더라도 (한.미는)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 부시 실장은 또 최근 위키리크스 파문에 언급, "미국의 위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재앙"이라고 규정한 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결국에는 해결되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北, 6자거부 이유는 中.러 대북제재 지지"(12/2)

- 북한이 과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의 유엔 대북제재 지지에 불만을 품고 6자회담을 거부했었다는 내용의 미국 외교전문이 공개됐음.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일(현지시각) 공개한 주몽골 미국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북한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8월 몽골-북한간 연례 협의회에서 6자회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음.
- 현지 주재 외교단에 양국 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한 J. 숙희(Sukhee) 몽골외교통상부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 부상이 6자 회담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은 끝장났다(dead)는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음.
-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부상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것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라고 밝혔음. 당시 김 부상은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데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들 3자를 지지하면서 북한은 마치 '5 대 1(five against one)' 상황에 처한 느낌"이라는 말을 했다고 숙희 부국장이 전했음.
- 김 부상은 이어 "6자 회담의 진정한 목적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는 말도 했음.
- 이 전문에는 또 북한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대화의 기대를 키웠다는 김 부상의 발언도 담겨 있음. 김 부상은

당시 억류된 여기자 석방을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그러한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음.

- 또 김 부상은 "부시 정권 때 양국 관계가 막혔지만 클린턴의 개인적 능력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기 때문"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음.

양제츠 "불길에 다시 기름부어선 안돼"(12/1)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1일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해 "불길에 다시 기름을 붓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음. 양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란팅(藍廳)' 포럼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되고 있으며 급선무는 이런 긴장국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중국은 작금의 상황을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사태 그 자체의 시비곡직(是非曲直)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유관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대화와 담판의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양 부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미국을 필두로 중국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나선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그는 이어 또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에 대해서는 "현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힘을 실었음.
- 중국은 지난 28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통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이달 상순에 열자고 제안한데 이어 30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안을 재고하라고 관련국에 촉구했음.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가 한반도 정세 긴장 완화의 출발점이며 이를 기회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미국-일본 3국은 북한이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임.
- 포럼에서 양 부장은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힘과 대립을 과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관련 당사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안정은 모두에게 득이며 혼돈은 모두에게 해롭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그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관계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윈-윈(win-win)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위성락, 러 6자회담 대표와 전화 협의(12/1)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이 지난달 30일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한반도 위기상황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 외무부가 발표했음.
- 러 외무부는 이날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국 측의 요청으로 11월 30일 보로다브킨 러시아 차관과 위성락 본부장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며 "통화에서는 한반도 상황,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대결적 시나리오에 따른 상황 발전 예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음.
- 이날 위 본부장과 보로다브킨 차관의 통화는 전날 이윤호 주 러시아 한국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를 방문해 보로다브킨 차관과 면담한 데 이어 이뤄진 것임. 김성환 외교부장관도 1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가 열리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한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이나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달리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

"中, 北美中 3자대화 비밀제안"<위키리크스>(12/1)

-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6자회담 체제 대신 중국과 미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대화를 비밀리에 미국에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음.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월 미국에 이 같은 제안을 비밀리에 전달했음. 이는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대체하는 사실상의 새로운 대화 체제를 의미함.
-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제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러 "中 6자회담 개최 제안 지지"(12/1)

-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30일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추르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당사국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앞서 지난 28일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처음 제안했으며, 이에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러시아는 그동안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

- 아울러 추르킨 대사는 일본이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그는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누구도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 25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음. 러시아 외무부 기록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반면 중국은 안보리 회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6자회담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임. 양타오 유엔 주재 중국 정무담당관은 6자회담과 관련, 북한 핵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면서 "가장 유용한 대화체 가운데 하나로,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中,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재고 촉구(11/30)

-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건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음.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제안의 출발점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로 각측에게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홍 대변인은 "현재 정세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긴박하다고 보며 6자회담의 틀안에서 대화와 협상해 타당하게 관심문제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음.
- 홍 대변인은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또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조만간 방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각종 방식으로 각측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음.
- 그는 북한이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수천대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진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해왔고 9.19 공동선언 달성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음.
- 홍 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당 비서의 일정에 대해 "베이징(北京)과 지린성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각종 방식으로 각측과 한반도 긴장 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최 의장과 연평도 포격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최근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공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그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안보리 '北우라늄 농축' 제재 강화 검토(11/3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북 제재 활동의 강화를 검토키로 했음. 또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음.
- 안보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북 제재위원회의의 보고 자리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이 최근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관찰한 북한의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음.
- 대북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활동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안보리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음.
-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지난주 치명적인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최근 미국 핵전문가의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과 관련한 증언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회의 도중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 내용을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대(對)언론브리핑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이 "아직 본국의 훈령을 받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시해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음.
- 회의가 끝난 뒤 라이스 대사는 기자들에게 "이는 분명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안보리는 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랜트 대사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최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음. 그는 자신도 의장이 아닌 영국 대표 자격으로 북한의 한국 공격을 비난했으며, 이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히고 "많은 국가들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음.
- 그랜트 대사는 그러나 향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와 관련해 "뉴욕 유엔본부와 각국 정부들 사이에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만 말했음.
- 현재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연평도 포격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중국 측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안보리 회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상황 변화도 없으며 예측하기도 어렵다"면서 "안보리 내부 논의를 지켜보면서 어떤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현인택 장관, 美에 北 '불장난' 가능성 경고"(11/30)

-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정권교체기인 북한이 핵실험 등 '불장난'(fireworks)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측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2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정권교체기를 맞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전달했음. 현 장관은 이와 함께 현금이 필요한 북한 정권이 "핵기술은 물론 플루토늄까지 수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음.
- 중국과 한국 내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이 권력계승자로 부상할 때 그에게 군사적 '영예'를 안겨주기 위한 새로운 도발 행위(muscle-flexing)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사전 경고하기도 했음. 가디언은 위키리크스가 이번에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예측된 재난에 대한 연대기'라고 비유했음.
- 그러나 한국과 중국,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상했음에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북한의 폐쇄적 환경 등으로 이러한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음.
- 한편 미국 의회는 2008년 3월 북한의 원심분리기 구매정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청징예(成競業) 군축대사와 접촉했으나 중국 측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중하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음.

"日, 6자회담 긴급협의 제안 거절"<WSJ>(11/30)

- 일본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진심어린 노력'을 촉구하며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를 거절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제안과 관련해 "단지 북한이 도를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has gone amok) 6자회담을 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일본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나 최근 사건(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된 북한의 '진심어린 노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음.

- 한편 중국 측의 이번 제안과 관련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미국, 한국과 공조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日 간 총리, 中 6자회담 제안에 부정적(11/29)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에 대해 한국, 미국과 공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29일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오후 야당 당수들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과 관련 "미국, 한국과 공조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음.
- 이는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한국, 미국과 입장을 함께한 것임.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연평도에) 민간인을 포함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핵 개발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기존 합의에 반(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기존 6자회담)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관련국들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한국도 (중국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일 낌새가 없다"면서 "미국, 한국과 공조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간 총리는 이날 야당 당수들과의 회동에서 조선왕실의궤 등을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도 관계가 있는만큼 (비준을) 부탁한다"고 말해 임시국회 회기(12월 3일)내 처리를 요청했음.

○ "북한, 중국 6자회담 제안에 회의적"<교도>(11/29)

- 북한의 고위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극대화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3자 대화가 우선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전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북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을 소집하기에 앞서 "(최근 대결 국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 6자회담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 과정을 살펴보려면 남한과 미국의 행동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회의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날 내놓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음.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전쟁 회피, 北자제 방안 논의"(12/3)

-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내주초 만나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고 북한의 자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확신을 주고, 집권층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과는 다른 국가운영 방법이 있다는 점도 (북한에)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클린턴 장관은 "이런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미 중국 및 러시아의 고위관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오는 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모두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전망임.
- 이어 클린턴 장관은 "한국이 엄청난 자제력을 보여줘 왔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한 뒤 천안함 사태 이후의 한국사정을 설명했음.
- 클린턴 장관은 "만일 여러분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봐달라"며 "이웃한 나라가 지난 몇달간 여러분의 해군함정을 격침해 46명의 선원을 숨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을을 공격해 군인과 민간인을 숨지게 했는데도 여러분은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제력을 행사해 왔다고 가정해 보자"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그래서 여러분은 (공격을 가한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행동을 중단시켜야만 한다"면서 "만일 계속해서 그 나라가 여러분의 국민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우리를 둘러싼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즉각적인 위협 요인"이라면서 "붕괴한다면 중국에도 중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핵개발 프로그램과 무기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음.

다. 중·북 관계

○ 北 최태복 의장, 中 지린 방문(12/3)

- 지난달 30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 2일 지린(吉林)성을 방문했다고 길림일보(吉林日報)가 3일 보도했

음. 최 의장은 이날 지린에서 쑨정차이(孫政才)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성장 등 지린성 간부들과 만나 양측의 교류 확대와 경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최 의장은 3일에도 중국 동북지역에 머문 뒤 4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언론은 그가 방중 기간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올해 北中 교역, 사상 최대 예상"< VOA >(12/2)

- 올해 북중 교역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음. 이 방송에 따르면 올 1~10월 북중 교역액은 작년 동기보다 32% 많은 미화 26억9천100만 달러로, 작년 전체 교역액(26억8천100만 달러)을 이미 넘어섰으며, 사상 최고였던 2008년(27억9천300만 달러)과 비교해도 1억200만 달러 밖에 차이나지 않음.
- 북한은 그러나 수입 17억8천만 달러(31% 증가), 수출 9억1천만 달러(35%〃)로 8억7천만 달러(26.6% 〃)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VOA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7억9천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였다"서 "올해에는 10월까지 실적만 갖고 이미 최고기록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음.
- 수출은 특히 △7월 1억3천600만 달러(61% 증가) △8월 1억6천300만 달러(86%〃) △9월 1억3천100만 달러(64%〃) △10월 1억2천900만 달러(130%〃) 등 하반기 들어 호조를 보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5월, 8월 두 차례 방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부원장은 "올들어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은 24만5천t으로 작년 전체(20만3천t)보다 20.7% 증가했고, 비료 수입도 28만3천t으로 작년(10만6천t)보다 167% 급증했다"고 말했음.

우방궈-최태복 회담..연평도사태 속 우의 과시(12/1)

- 중국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하고 친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음.
- 우 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은 산천을 맞댄 이웃국가로서 두 나라의 전통적 우의는 국제적 풍운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왔다"며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변치않는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음.
- 우 위원장은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해 후 주석과 쌍방 관계 및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함으로

써 양국 관계가 중요한 발전을 이뤄냈다고 지적하면서 고위층 교류를 지속하고 전략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협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자고 제안했음.

- 이에 최 의장은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건설한 북중 전통 우의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양국 인민들의 이익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밝혔음.
- 최 의장은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중국 전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면서 특히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무역과 관련한 입법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음. CCTV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와 연평도 포격 사태가 의제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

"北최태복, 中천즈리와 회동"<中신화>(12/1)

- 중국의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이 1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천 부위원장은 전인대에서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아래인 최 의장의 중국측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음. 신화통신은 그러나 천 부위원장과 최 의장 간의 자세한 회동 소식은 전하지 않았음.
- 최 의장은 우방궈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30일 방중했으며 4박5일간 머물 예정이며 베이징(北京)과 지린(吉林)성을 방문할 예정임.

北최태복 방중..연평도포격 논의할듯(11/30)

-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30일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음.
- 최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재진의 잇단 질문 공세에도 응하지 않은 채 중국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음. 공항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된 탓인지 외신기자 4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음.
- 최 의장의 이번 방중은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다음달 4일까지 머물 예정임. 그러나 중국 측은 최 의장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체 알리지 않았음.
- 최 의장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와 전인대 간의 교류차원에서 방중하는 것이지만 실제 노동당 비서를 겸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 고위인사들을 만나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음.
- 최 의장은 지난 9월 28일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후 이틀만인 같은 달 30일 중국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소식 등을 포함한 대표자회 결과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직접 설명한 적이 있음. 최 의장의 이번 방중에 누가 수행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행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中시민 70% "中, 北도발에 중립지켜야"(11/29)

- 중국 대도시 시민은 10명중 7명이상이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고 남북한간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환구여론조사중심이 지난 26~28일 사흘간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창샤(長沙), 청두(成都)등 7개 대도시의 18세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음.
- 환구시보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한반도 사태에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1천306명중 72.3%나 됐음. 중국이 한미와 연합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1% 였음.
- 북한이 중국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와 '중국의 동맹국'이라는 답변이 각각 44.7%와 43.2%로 북한에 우호적인 시각이 절대적 다수였음. 반면 '북한은 중국의 골치거리 이웃'이라는 반응은 14.1%에 불과했고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15.0%에 그쳤음.
- 응답자의 60.4%는 북-중 양국 관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양국간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보통국가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답변은 33.2%였음.
- 최근 들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56.7%가 사태가 너무 복잡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북한이 압박에 몰린 끝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답변이 22.4%인 반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는 답변은 9.5%에 불과,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이 더욱 많았음.
-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별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6%가 미국을 '주범'으로 지목, 반미 감정을 드러냈고 한국이 10.3%, 북한이 9.0%의 순으로 역시 친북 성향을 보였음. 응답자의 61.4%는 한반도 위기가 한반도에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전면전쟁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한 응답자는 34.2%였음.
- 상하이 퉁지(同濟)대학 아태연구소중심 차이젠궈(蔡建國) 주임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중국 시민들이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하고 국제사회

는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중국인의 입장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라. 기 타

○ 김성환, OSCE 정상들에 "北도발 단호 대응해야"(12/2)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및 협력동반자국 정상들에게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에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음. 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OSCE 정상회담 전체회의에 참석, 한-OSCE 간 협력증진 방안을 밝히는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촉구했음.
- 김 장관은 연평도 포격은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한 간 제반 합의를 위반한 불법 공격이며, 특히 민간 거주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OSCE 참여국들이 북한의 불법 공격행위에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 달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영국, 호주와 일본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대응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음. 또 그리스는 연평도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의 도발을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고 규탄했음.

○ 한, 미, 러, OSCE 무대서 연평도 도발.6자회담 협의(12/1)

- 한.미 양국은 1일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 등 도발적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 참석 중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연평도 포격 사건의 대응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회담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음. 또 김 장관은 연평도 사건의 대응에서 미국이 최대한 협조와 지지를 보여준데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행위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환담을 갖고 한.러 관계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음. 김 장관은 러시아가 연평도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외교부 성명을 발

표하고 북한의 포격을 비난한 것을 평가했으며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음.

- 나아가 양국 장관은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및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양국관계가 확대, 심화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음.

러 "한반도 위기 외교로 해결해야" 강조(11/30)

-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음.
- 러시아 외교부가 30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29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사태와 관련 "이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관계에서의 모든 논쟁적 문제를 오로지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러시아가 중국이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 제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로다브킨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중국 측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한편 보로다브킨 차관은 29일 이윤호 주 러시아 한국대사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한 북한의 한국 영토 포격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남북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양측간에 고조된 긴장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러 외교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어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적극성은 극단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음.

"안보리 회부, '한·미·일 외교회담'서 가닥"(11/30)

- 북한 연평도 도발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여부가 다음주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거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30일 "정부는 이번주부터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안보리 이사국 내부의 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다음주초 연평도 도발 사건과 관련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다음주초 미국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연평도 도발사건과 중국의 6자 수석대표 회담 긴급제안 등에 대한 3국의 공동대응 기조를 정할 예정임.

3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유엔 헌장 위반 사안이라는 인식 속에서 안보리 회부를 통한 국제사회의 엄중대응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안보리의 정식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 측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안보리 회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번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은 영국이지만 순번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미국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안보리 회부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음 달 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국은 4명의 인명을 숨지게 한 북한의 '잔인무도한' 연평도 포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핵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리 회부로 가닥이 잡힐 경우 지난 천안함 사태때처럼 정부가 직접 제안하기 보다는 동맹, 우방국이 대신 제안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로서는 지난번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논의과정을 겪어봤던 만큼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안보리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음.

<러 '北정면비난'..연평도 외교전 새구도 주목>(11/30)

- 북한 연평도 도발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에 '러시아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음. 그동안 한반도 현안대응을 놓고 중국과 보조를 맞춰온 러시아가 북한을 정면 비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로 흐르는 듯하던 외교구도에 새로운 판짜기를 하는 흐름임.
- 러시아 외무부는 30일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입장을 통해 "남북관계의 악화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측은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물론 러시아 정부 내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연평도 포격 당일인 23일 "남한의 섬(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을 '공격자'로 특정해 정면 비난을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무게감은 분명히 다르다는 분석임.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러시아의 이번 입장표명은 종전에 비해 확실히 진화(進化)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의미를 두고 평가할 사안"이라고 말했음.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일단 이번 사안의 성격상 북한의 책임이 워낙 명백하고 그에 따라 주요국가들이 앞다퉈 대북 규탄성명을 내놓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여기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현지 주러 대사관 등 정부 당국 차원의 외교적 교섭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옴.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을 상대로 다각도에서 외교적 설득노력이 이뤄졌다"고 말했음.
-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정리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관찰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음.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 이후부터 한반도 안보논의가 미·중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동북아 역내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며 한반도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러시아가 중국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사건을 안보리로 끌고가 미·중 구도가 아니라 P5(상임이사국 5개)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임.
-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의 한반도 외교전의 향배에 상당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천안함 이후 암묵적 공조 스탠스를 취해온 중·러 사이에 일종의 '디커플링(Decoupling.차별화)'이 이뤄진 셈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한, 미, 일' 대 '북, 중, 러'의 외교전 구도가 와해되면서 점차 북, 중이 포위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금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안보리 회부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정부, 미·일과 '연평도 공조' 박차(11/29)

-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맹·우방국가와의 공조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는 중국이 28일 6자 긴급협의 개최를 제안하며 대화국면으로의 조기 전환을 꾀하는데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연평도 해법'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이 가속화될 전망임.
- 한·미·일 3국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29일 밝혔음. 한·미·일 3국은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6자회담 재개 여

건을 조성하는게 우선 과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음.

- 외교소식통은 "연평도 사태를 비롯해 전반적 한반도 정세에 관한 3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6자회담 조기 재개 방안에 대한 3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달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 참석,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임. 김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로 야기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음.
- 김 장관은 회의기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외교부 당국자는 "OSCE가 유럽 안보문제를 다루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부터 본격화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연평도 사건 회부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한미FTA 추가협상에 美서도 불만 목소리(12/5)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음. 미 의회의 FTA 이행법안 논의 시 상원의 관문 역할을 하게될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한국이 계속 제한할 경우, 한미FTA의 상원비준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미 ABC방송이 4일 보도했음.
- ABC방송은 이날 '획기적 합의 혹은 반쪽의 합의? 쇠고기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백악관이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한미FTA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전했음.
- 방송은 "백악관도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보커스 의원 및 한국 측과 협의를 해서 모든 월령의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그러나 이 행정부 관리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서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음.

- 보커스 의원은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또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또 다른 산별노조인 전미철강노조(USW)는 아직 이번 합의에 대한 태도 표명을 유보하고 있음. 레오 제라드 USW 위원장은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UAW가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USW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제라드 위원장은 "일부 사람은 소문만 듣고 결정을 내릴 정도로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는 좀 더 신중할 생각"이라면서 오는 6일 노조 집행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섬유·의류염료업계를 주요 회원사로 둔 전미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도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음. AMTAC의 오기 탄틸로 집행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내용에 업계가 지적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미 제조업 분야에서 수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역대 미국의 FTA들이 사실상 수출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듯이 이번 한미FTA도 그런 결과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음.

<한미FTA 타결에 美의회.재계 환영>(12/5)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현지시간) 타결된데 대해 미국 의회는 대체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음. 또 이번 추가협상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된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미국 재계와 관련 단체들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는 등 크게 환영했음.
-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의 수출을 늘려 추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자동차 문제에 대한 기존 FTA 합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 왔던 의회 내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음.
-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시 하원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세입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이 유력한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승리"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현재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고 가능한 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번 협상 타결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미국 수출 확대뿐 아니라 역내 진행 중인 다른 자유무역협상들과 함께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맞서는 중요한 균형추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음.
- 하원 세입위원회의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현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극적인 진전"이며 "미국 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 자동차분야를 포함 미 제조업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인 만큼 지지한다"고 말했음.
- 하원 무역 소위원회 간사인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한국은 핵심 동맹국이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이번 합의로 인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수출확대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음.
-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장은 "협정을 검토한 뒤 조기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면서 "한미FTA야말로 내년에 새롭게 구성될 미 의회가 오늘날과 같이 다극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짐 웹(버지니아)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한미 FTA는 미국 경제를 강화시켜주고, 동맹국인 한국 및 역내 나머지 국가들에 미국이 약속을 준수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강력히 관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평가했음.
- 하지만 FTA 이행법안 논의 시 상원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음. 보커스 의원은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의 입장을 감안해 월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전면 개방 입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음.
- 그는 "이번 합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들을 다루는데 실패했다는데 대해 깊이 실망한다"면서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깊이 약속한다"고 밝혔음. 하원에서도 마이크 미쇼(민주.메인) 의원을 비롯한 일부에서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보였음.
- 기존 한.미FTA에 대한 강력한 비판론자인 미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몇 주전 백악관에 가서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존에 합의된 FTA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그런 우려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한편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 자동차 업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음. 포드자동차의 최고경영자(CEO)인

앨런 멀랠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미FTA의 개정내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룸으로써 명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이번 합의로 인해 포드자동차는 한국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음.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 겸 CEO는 “이번 합의로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년 내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국가적인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한미FTA 비준을 1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것이며, 우리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음.
-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은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양국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며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오바마 “한미FTA, 윈-윈 합의”(1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윈(win)-윈(win)’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환영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몇가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을 성취했다”면서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 근로자,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한 뒤 특히 미 자동차업계가 한국 시장에 대한 훨씬 더 확대된 시장접근 기회를 얻게 됐으며 “미국 내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것이며, 자신이 추진하는 향후 5년 내 수출 2배 증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그는 또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을 얻을 것이며,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품을 좀 더 값싸게 만들어 주고,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또 한국과 미국간의 강력한 동맹의 승리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그는 특히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한국 국민에 대한 공격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는 오늘 한미 양국의 방어동맹과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에 대해 나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음.
-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한국측과 일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향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침을 밝히면서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음.
- 그는 “이번 합의가 근로자들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특히 기쁘다”면서 “이번 합의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계속 추진할 공정한 무역협정의 예가 된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3일 저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획기적 합의로 미국의 재화 수출이 연간 110억달러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적극적인 의회 비준 추진 방침을 밝혔음.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12/5)

- 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음.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음.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음.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음.
- 돼지고기 관세는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는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조정해 2년을 연장했음. 김 본부장은 이는 우리가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으로 관세 연장 대상인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은 우리의 대(對)미 돼지고기 총 수입액 가운데 6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음.
- 아울러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음. 종전의 한미 FTA 협정은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했음.
- 양국은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음.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져

잦은 비자 갱신을 위한 출국과 서류구비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음.

김종훈 "한미FTA, 우리도 챙긴 것 있다"(12/4)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우리도 챙긴 것이 있다며 정식 발표 후 평가해달라고 말했음.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협상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확인, 승인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 정식 발표가 있을 테니 나중에 평가해 달라"고 밝혔음.
-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챙긴 것이 있다"고 말했고, 일부 농산품 분야의 관세 철폐 시기 유예 등을 포함한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만 짧게 말했음.
- 그는 이어 "자동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너무 많이 팔고 자기(미국)들은 너무 적게 판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미 행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미 의회의 의견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음.
-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자동차 협상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어떤 내용이 공개됐느냐"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미국측의 선(先)공개를 우리측이 양해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음.
- 애초 한미 양국은 FTA 타결 내용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USTR은 우리 협상팀이 귀국하는 동안 홈페이지에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미룬 내용 등을 공개했음.
- 김 본부장은 협정문이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제를 다루는 전문 부처가 있으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협정문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음.
- 쇠고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추가 협상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은 원래부터 FTA를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음.

한국車 관세철폐 5년이내로 연장(12/4)

- 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음.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음.
-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음. USTR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보를 얻은 내용만 공개했으며 한국측에 양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하지만 자동차 관련 이번 합의내용은 한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아 논란이 예상됨.
- USTR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이내로 늦췄음. 또 10년간 25%의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던 트럭에 대해서도 FTA 발효 후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9년, 10년째에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음.
- 반면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8%의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키로 했었으나 이번 합의에선 4년동안은 4%로 감축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토록 했음. 이어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4년동안은 4%로 절반 감축하고 5년째에 모두 철폐키로 했음.
-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FTA 발효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양국은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4배 이상 상향 조정키로 했음. 이에 따라 한국에서 연간 2만5천대 미만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규정을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함.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차가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USTR은 밝혔음. 이는 한국 정부로부터 20%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양보를 얻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됨.
-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업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상 권고하는 6개월의 2배 기간임.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 관련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음.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음.
- 자동차 특별 세이프 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

동할 수 있도록 해 승용차의 경우 15년, 픽업트럭은 20년간 적용이 가능함. 더욱이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번 이상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일부 자동차 제품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 USTR은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미국이 얻은 것 위주로 발표한 반면,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유예 등 자국에 불리한 내용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음. 한편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한미FTA 타결..“자동차 양보, 쇠고기 제외”(12/3)

-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전격 타결됐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20여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담판을 벌여 합의에 이르렀음.
-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 관철했음.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결과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됨.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한미관계가 중요한데 양국간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양국관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진간에 이번 합의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걸쳐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임.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FTA 관련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한미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각각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음. 김종훈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외교부 “美정부 외교문서 유출, 한국에 사전설명”(12/2)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2일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문서 공개 파문과 관련해 “관련문서가 공개되기 이전부터 미측과 협의를 해왔고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관련사항의 설명과 함

께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음.

-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키리크스에 의한 외교문서 유출공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규탄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음.

"외교부, FTA 美의회 로비에 26억 편성"(12/2)

-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인준을 위한 미국측 법률.의회 자문료 명목 등으로 26억7천9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한미 FTA 미국 의회 인준 및 후속조치'를 위해 의회활동 자문 11억400만원, 대미 경제.통상네트워크 사업 6억7천800만원, 홍보 3억4천500만원, 통상정책과 법률 자문 각각 2억7천600만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음.
- 앞서 외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미국측 법률, 의회 자문에 24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는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 등 3개 미국 업체와 의회자문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했었음.

한미 FTA '주고받기식 절충' 본격화(12/1)

- 한국과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인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최종타결하기 위한 주고받기식 협상에 착수했음. 특히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1차 협상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데 논의의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이틀간의 짧은 일정내에 합의에 이를지 주목됨.
-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주요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목소리로 FTA 협상 타결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이끄는 양측 FTA 협상대표단은 이날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시의 쉐라톤 컬럼비아 타운센터 호텔에서 만나 이틀간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음.
- 이달 초순 서울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20일만에 다시 대좌한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동안 1차 회의를 가진 뒤 오후 4시15분께부터 1시간 여 동안 2차 회의를 이어갔음.
- 김 본부장은 두 차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그 꼭지 그대로다"면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날 협상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혀, 자동차 문제 위주로 협상이 진행됐음을 시

사했음.

- 특히 그는 이번 협상은 '패키지딜'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종 합의가 안되면 어느 것도 합의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바로 협상 대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음.
- 따라서 협상에선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 확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등을 놓고 주고받기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인 것으로 관측됨.
- 김 본부장은 협상 전망에 대해 "쉽게 되겠다, 아주 어렵겠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더 해봐야 안다"면서도 "저쪽(미국측)도 이번에 결론을 내자는 의지는 있고, 저도 여기 올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왔다"고 양측의 협상타결 의지를 강조했음.
- 커크 대표도 이날 두 번째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결과에 대해 "좋았다"면서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12월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한미 양국은 이번에 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실무차원에서 곧바로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임. 김 본부장은 "조문화 작업까지 완전히 마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면서 "(한미간에) 조문화작업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마치자는 얘기를 계속해왔다"고 덧붙였음.

나. 한·중 관계

○ 中언론 "韓, 中과 협력해 위기 해소해야"(12/2)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중국과 협력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반관영인 이 신문은 이날 '한국은 중립(중국의)에 대한 이해가 편향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가 서해에서 북한을 겨냥해 연합훈련을 실시했지만 한반도 긴장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공동노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또 중국이 비위협적인 방법을 통해 역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중국의 제안에 귀기울이고 인내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중국은 사실 남북한에 공평한데도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비난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런 자세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음.

- 사설은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중국도 피해자이며 중국은 역내 안정에 대해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국익 때문에 남북한을 화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사설은 한·미·일이 여전히 북한을 냉전적 사고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고로는 역내 평화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음.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냉전적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한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총리 "3일까지 일한도서협정 비준을"(12/1)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일 야당 측에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을 조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간 총리는 이날 밤 기자단에 "아직 (임시국회) 회기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일한(한일) 우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음. 3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협정을 비준해달라고 야당 측에 요청한 것임. 앞서 여야는 이날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음.
- 한일 정상은 지난달 14일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권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도서협정을 체결했음. 일본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시에 책을 넘겨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제1야당인 자민당은 정권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의 교체 등을 요구하며 좀처럼 도서협정 비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 韓日 의원 "北 연평도 공격 규탄" 공동성명(11/29)

-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규탄하고 비난성명을 발표했음. 한일의원연맹과 일본측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100여명은 29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제34회 합동 총회를 열고 북한의 공격을 "유엔 헌장과 한반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음.
- 의원들은 "북한이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사죄한 뒤 책임 있는 재발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음. 다만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성명 초안에 포함된 북일 관계 정상화 촉구 등의 방법에 대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음. 양국 의원들의 공동 성명에는 결국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대화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적는데 그쳤음.

- 양국 간 쟁점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국측 의원들이 "일본이 농업 분야 등에서 대폭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일본은 FTA 체결의 이점을 강조하는데 그쳐 단일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음.
- 재일동포 등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도 일본측 의원들이 '재일 중국인 등 일반 영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대한 일본 내의 우려'를 강조하며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의원들은 "주요 8개국(G8)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지 않는 국가는 일본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좀 더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음. 한편 양국 의원들은 내년 한국에서 35차 합동총회를 열기로 했음.

○ 日총리 "李대통령 12월 방일 가능성"(11/29)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9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이 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일, 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12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한반도에서 유래한 조선왕실의궤 등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한일도서협정의 비준에 야권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음.
- 간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일본과 한국, 미국이 일치협력해 북한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음.
- 이 통신은 "양국 정부는 교토(京都)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추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 한편 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도서 반환과 관련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인도한다(引き渡す)"라는 표현 대신 "돌려준다(返す)"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음.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반환"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는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 이미 문화재를 돌려준데다, "반환"은 "빼앗은 것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자발적으로 준다"는 의미의 "인도"를 쓰겠다고 고집해왔음.
-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도서협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음.

라. 미·중 관계

美中 정당 고위대화.."전략.장기 소통"(12/5)

- 중국 공산당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고위급 대화를 갖고 전략.장기적 소통을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5일 보도했음.
-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고위급 대화에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민주당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리처드 윌리엄슨 전 국무부 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음.
- 인민일보는 양측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 문제 또한 의제에 올랐을 가능성을 시사했음.
- 왕 부장은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2.5계획)의 내용과 의의, 화평발전 전략 등 중국의 내정.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소통하고 교류해 서로를 귀감으로 삼자고 제안했음. 왕 부장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캐나다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함.

美 "北, 도발중단이 우선"..中제안에 난색(11/29)

- 미국은 28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 제안에 대해 한.일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간 협의를 하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중단 등 행동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우리는 중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향후 진로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 로이터통신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6자회담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도발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이 행동을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음.
-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음. 크롤리 차관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클린턴 장관은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잘못 해석할 수 없는

강력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중국에) 촉구했다"고 전했음.

- 클린턴 장관의 이런 언급은 중국의 제안 이후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이빙궈-클린턴 전화회담..美中 긴밀 접촉키로(11/29)

-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8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양국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다이 국무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사태의 역학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음. 그는 그러면서 급선무는 현재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음.
- 그는 또 위태로운 시기에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서 중국의 모든 노력의 시작점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며 유관 각 측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에 클린턴 장관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 안정 유지에 이해를 함께하고 있으며 양국의 협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꺼이 공동노력하겠다고 말했음. 신화통신은 양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음.
- 다이 국무위원은 이틀간의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고서 곧바로 클린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협의를 벌였음. 앞서 양제츠 외교부장은 2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데 이어 27일 한국-미국-일본-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 회담을 한 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美日, 北中 겨냥 공통전략목표 개정"(12/5)

- 미국과 일본이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전략목표'를 개정한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 봄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전략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음.
- 양국은 2005년 2월 공통전략목표에 합의하고 2007년 이를 재확인했음. 이 공통전략목표는 일본의 안전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로 했고, 세계규모의 목표로 민주주의 추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테러방지 등을 제시했음. 중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국제적 이해공유자로 행동하고 군사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음.

- 양국이 협의할 새로운 공통전략목표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을 감안해 중국에 대한 표현을 재검토하기로 했음. 북한에 대해서도 천안함 침몰,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행위를 고려해 엄중한 표현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美日, 북한 붕괴 대비 정책협의(12/4)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정책협의를 시작한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내 혼란과 대량 난민 발생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책협의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음.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의 불투명성 등으로 북한 상황이 급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미일 정책협의는 일본측이 요청했으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외무성에 미국과의 협의를 지시했음.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문제, 핵실험 등에 따라 미일 정책협의가 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준비해놓고 있는 '개념계획 5029'를 참고해 공동작전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이런 논의에 강하게 반발해왔고, 중국도 비공식적 정부간 협의에서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반대해 미국과 일본의 정책협의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

"美, 하토야마 정권 당시 北-日 접촉 우려"(11/30)

- 미국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재임 중 북한과 일본의 접촉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음.
- 외교전문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월22일 서울에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났을 때 북한이 일본 민주당 간부에게 접근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 김 장관도 당시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음.
- 캠벨 차관보는 이어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정권)과 전혀 다르다"며 일본 민주당이 북한에 뭔가 제안할 때에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 비서관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당시 일본 측이 북한에 하려고 한 제안의 내용은 외교전문에는 적혀 있지 않았음. 김 장관과 캠벨 차관보가 대화를 나눈 시점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의욕을 표시한 직후였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측도 일본의 문을 두드리자 한.미 외교 당국자가 이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임.

- 외교전문 중에는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집착하는 데 대해 중국이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6월17일자 전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자는 주중 미국 대리대사에게 일본이 납치문제에 집착한 끝에 "(6자회담 틀을) 부술 지경에 이르렀고, (회담을) 성공하게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美日 합동훈련 대응훈련(12/5)

-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홍콩의 문회보(文匯報)가 5일 보도했음.
- 문회보는 "해방군보(解放軍報) 인터넷판인 중국군망(中國軍網)은 최근 인민해방군이 서해(중국명 黃海), 보하이만(渤海灣), 선양군구(瀋陽軍區) 직할 지역에서 실시된 다양한 군사훈련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음.
- 그러면서 문회보는 "외부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부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3국간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앞서 중국군망은 지난 1일 수도 베이징을 방어하는 베이징군구(北京軍區)의 미사일부대인 베이쿵(北空)부대와 북해.동해 함대가 지난달 29일과 30일 美 항모가 참가한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벌이는 사진을 공개했음. 미국과 일본은 지난 3일부터 일본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오는 1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일본의 육해공자위대 병력 3만4천명, 함정 40척, 항공기 250기와 미국의 병력 1만여명과 함정 20척, 항공기 150기가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훈련임.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 "日공관 진입 탈북자, 중일관계 악화로 발 묶여"(12/4)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내 일본 영사관에 진입해 일본행을 신청한 탈북자 5명이 3년이 다되도록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4일 전했음.
- 가토 히로시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대표는 VOA에 "지난 2008년 초 중국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여성 4명, 남성 1명 등 탈북자 5명이 3년 가까이 영사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들의 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서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7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 외교공관이 더는 탈북자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음.
- 히로시 대표는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는 약 200명으로, 대부분 동남아나 몽골을 경유해 입국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재일한인 출신이거나, 먼저 일본에 정착한 탈북 가족이 있어 일본행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그는 "외교 문제로 출국이 지연되는 경우 마땅한 해법이 없어 최근에는 일본 정부는 외교를 통한 탈북자 구출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음.

中, 美日군사훈련 개시에 긴장(12/3)

- 중국이 3일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훈련에 긴장하고 있음. 중국은 한미 서해훈련에 연이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이 사실상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실시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옵서버 자격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처음으로 미일 훈련에 참가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은 이날 일제히 동북아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잇따른 합동 군사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신문사는 일본 매체를 인용해 이번 미일 훈련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서 중일 영토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점을 경계한다고 전했음.
- 신화통신은 미일 합동훈련은 지난 1986년 이후 이번이 10번째로 훈련규모가 한미 서해훈련의 6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일본 자위대 3만4천100명, 미군 1만400명에 항공기 250척과 함정 40척, 항모 조지 워싱턴호도 참여하는 등 전례없는 대규모라고 전했음.
- 인민일보는 이번 훈련에 한국군이 옵서버로 처음 참석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참석인원과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큰 관심을 보였음.
- 중국은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비롯된 한반도 대치가 미 항모가 참가한 한미 서해 군사훈련으로 이어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은데다 다시 중일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 부근에서의 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음.
- 중국 내 일각에서는 이런 군사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공고화돼 중국·북한과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이런 탓에 중국은 최근 일련의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국제사회는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동맹에 기대

거나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 그러면서 오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지고 있다"면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긴장을 높이고 대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했음. 중국은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배후에 복잡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음.

사. 일·러 관계

○ 주러 日 대사, 러 외무차관 면담(12/3)

-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가 2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 외교부가 이날 밝혔음.
- 러 외교부의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대결 상황의 악화를 허용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의 긴장 해소를 위해 러-일간 정치적 협력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음. 이날 면담은 고노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발표문은 전했음.

[참고 1] 〈한미 FTA〉 협상일지(12/3)

(컬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박상돈 기자 = 한미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또 추가협상을 본격화한 지 1개월 여 만에 협상을 완전히 매듭짓고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한미 간 FTA 협상 전체 과정.

◇ 2006년
- ▲ 6월 5~9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워싱턴)
- ▲ 7월10~14일 = 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
- ▲ 9월 6~9일 = 3차 협상(시애틀)
- ▲ 10월23~27일 = 4차 협상(제주)
- ▲ 12월 4~8일 = 5차 협상(몬태나)

◇ 2007년
- ▲ 1월15~19일 = 6차 협상(서울)
- ▲ 2월11~14일 = 7차 협상(워싱턴)
- ▲ 3월 8~12일 = 8차 협상(서울)
- ▲ 4월 2일 = 한미 FTA 타결
- ▲ 6월16일 = 미국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 ▲ 6월21~22일 = FTA 추가협상 1차 협상(서울)
- ▲ 6월25~27일 = FTA 추가협상 2차 협상(워싱턴)
- ▲ 6월29일 = 추가협상 최종타결
- ▲ 6월30일(미국시간) = FTA 협정문 서명(워싱턴)

◇ 2008년
- ▲ 4월15~19일 = 이명박 대통령-조지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캠프데이비드)
- ▲ 4월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 ▲ 6월12일 = 정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 발표
- ▲ 6월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 ▲ 10월8일 =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 ▲ 12월18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 2009년
- ▲ 4월 2일 = 이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런던)
- ▲ 4월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 ▲ 6월16일 = 이 대통령 방미,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 11월19일 =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 대통령과 회담..한미FTA 진전 협력 합의

◇ 2010년

▲ 6월26일 = 한미정상회담(토론토)..오바마, 한미FTA 새로운 논의 지시

▲ 7월29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론 커크 USTR 대표와 전화통화.. 한미 FTA 쟁점현안 실무협의 논의

▲ 9월23일 = 최석영 FTA 교섭대표,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와 비공식 접촉(일본)

▲ 10월 7일 = 김종훈,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 FTA 비공식 접촉(파리)

▲ 10월26일 = 김종훈·커크 한미 통상장관회의(샌프란시스코)

▲ 11월 4~7일 = 최석영·웬디 커틀러 한미 FTA 실무레벨 협의(서울)

▲ 11월 8~10일 = 김종훈·커크 한미 통상장관회의(서울)

▲ 11월11일 = 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쟁점현안 합의 실패..조속한 시일내 추가 협상 약속

▲ 11월30~12월3일 = 김종훈·커크 한미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FTA 쟁점현안 완전 타결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2/02/0503000000AKR20101202000900002.HTML

[참고 2]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요지〉(12/5)

◇ 자동차 분야

▲ 관세 분야

- 승용차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협정 발효 후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년 1월1일 협정 발효 전제시 2016년 1월1일)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 세이프가드

-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6개 요소는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다만 미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했다.

▲ 안전기준

-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요구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2만5천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도입 (한EU FTA 동일내용)

▲ 연비.CO2 기준 (2012~2015년간 시행 예정)

- 4천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투명성

-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한다. 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설정했다.

▲ 연비.CO2 기반 세제

- 향후 연비.CO2에 기반한 자동차 세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과 협의 절차만 반영한다.

◇ 한국 요구사항

▲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 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목살, 갈비살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했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 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시판 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했다.

▲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우리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 합의 문서 형식

- 이번 회의 결과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하기로 했다. '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 간 합의사항 골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문안을 작업하기로 했다. 문서 형식은 구속력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추진하되 연비.CO2 기준과 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서명된 문서는 비준 동의를 위해 양측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justdust@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2/05/0503000000AKR20101205036400002.HTML

[참고 3] 한미 FTA 달라진 내용(12/5)

	구분	추가합의내용	기존합의내용, 비고
미국측요구사항	승용차	모든 승용차 관세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 - 한국, 발효일에 관세 8%에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 간 유지 후 철폐 - 미국, 관세 2.5% 발효 후 4년 간 유지 후 철폐	- 한국, 모든 승용차 즉시 철폐 - 미국, 3,000cc 이하 즉시 철폐 3,000 초과 2년간 균등철폐
	전기자동차	한국(4%)과 미국(2.5%) 모두 4년 간 균등 철폐 - 한국, 발효일 관세 8%를 4%로 인하.	한국, 9년간 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화물자동차	미국, 9년간 관세(25%)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실제 발동 사례는 전무	신규 도입
	안전기준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기존 6천500대 기준에서 상향 조정
	연비, CO2 기준	4천500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는 19% 완화된 기준 적용	우리 정부 2012년부터 연비, CO2 기준 도입
우리측요구사항	돼지고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등) 관세 철폐 시기 2016년 1월1일로 연장	2014년 1월1일에서 2년 연장
	의약품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존에는 18개월 유예.
	L-1비자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지사 신규 창설시 1년→5년, 기존 지사 근무시 3년→5년	잦은 비자 갱신 위한 출국. 서류 구비 부담 완화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